

# 경제 자료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 외교 그리고 내부정세  
북한경제연구부



#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 외교 그리고 내부정세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 namjw@kdi.re.kr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Emma Chanlett-Avery와 아시아 문제 분석가 Ian E. Rinehart는 2014년 1월 15일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는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미국의 현재까지 대북정책 등이 일목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조사국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웹사이트 ([www.fas.org/sgp/crs/nuke/R41259.pdf](http://www.fas.org/sgp/crs/nuke/R41259.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 미국의 대북정책

### 1. 과거의 대북정책 개요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직접적인 양자포용 정책에서부터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의 하나로 지칭하는 것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 미사일 개발계획 등 여러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등의 협상 노력을 시도해왔고 그 중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다양한 대북정책을 펴 왔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양자협상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쓴바 있으며, 그 다음 부시 행정부 때는 주로 다자협상들을 이용해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의 의장국이자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역할이 커졌고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미와 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데, 일본은 해결하지 못한 납북일본인 문제로 인해 북한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북한에 매우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북한의 행동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지난 15년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3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탄도 미사일 실험 등 공공연한 도발을 동시에 자행하며 주변국에 혼란을 주고 있다. 북한은 주로 식량부족사태나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해 협상의지를 보인바 있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 참여국인 다른 5개국 사이의 입장 차이를 잘 활용하며 핵협상과정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능숙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의 권력층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독재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압박해야한다는 의견에서부터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과 취임 연설에서 ‘불량국가(rogue governments)’에 관여정책(engagement)을 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이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와중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돌아오길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견지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요소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 진행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설득하고 북한에는 무기 수출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상당한 양의 원조를 교환하는 패키지딜을 추구해 온 바 있다.

하지만 비핵화 논의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며 핵 확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비평가들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주도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꺾박한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핵 기술을 다른 나라나 테러 활동세력에 팔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협상의 진행을 막고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국제법 위반행동은 미국이 UNSC(UN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강화해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도발-제재-도발-제재의 주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의 참여와 지지에도 더욱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외중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은 한미일의 대북 3자협조를 강화시켰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궤를 같이하며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2005년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었다. 한미공조는 일련의 한미군사훈련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로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턴에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김정일의 사망 후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 양자협상을 다시 시작했을 때이다. 2012년 2월 29일에 발표된 ‘2·29합의(Leap Day Agreement)’는 두 개의 다른 합의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핵 실험, 장거리 미사일, 영변 핵시설에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유예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단의 재입북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24만톤에 이르는 영양 지원을 하고 북한과 문화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로 이 합의는 무효화 되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협상 파트너로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 3. 2009~2013년: 북한의 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 북한은 두 가지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이다. 수년간 북한의 협상태도를 관찰한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그저 전략적인

움직임뿐이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2012년 4월 13일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는 자국을 핵무장국가라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는 핵무기를 수십억달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 가. 2010년: 일련의 도발

다자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 사건 이후 같은 해 11월, 북한은 영변에 미국의 핵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경수로와 함께 소형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우회적으로 흘려보내는 전략적 행동을 취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11월 23일 연평도에 폭격을 가하며 도발 강도를 더욱 높였다.

#### 나. 2011~2012년: '2·29합의' 그리고 위성 발사

2011년 초 북한은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경제적 도움 및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외교활동을 재개했다. 김정일은 집권 마지막 20개월 동안 중국을 4번 방문했으며 중국의 경제발전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양자회담을 2011년 후부터 2012년 초까지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이는 결국 '2·29합의'로 이어졌다. 이때 미국은 북한에 어떠한 형식의 미사일 실험이든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2012년 3월 북한은 위성 발사를 강행하였고 미국은 '2·29합의'는 무효화되었다고 선언하게 되었다.

#### 다. 2013년: 세 번째 핵실험

2012년 12월부터 북한은 네 번째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등 다시 한 번 적대적인 도발을 자행하기 시작했고 2013년 2월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핵실험 이후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금융 제재를 가하였고 북한의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도 이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제재 참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붕괴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중국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 II. 북한의 내부 정세

### 1. 김정은 집권 2년

김정은 정권은 대외적 노력 없이 경제발전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일부에서는 유럽 유학경험이 있는 김정은이 개혁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집권 후 그의 무자비한 행보는 독재정권을 고수하려는 그의 욕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디즈니 캐릭터나 의복스타일 등의 서방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빈번한 대중 노출을 한다는 점에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통치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인민에게 김정은이 젊고 현대적인 이미지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놀이공원 개보수·스마트폰 사용증가 등 북한인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실질적 변화는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합동농장의 크기를 줄이고 농민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실험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외부로 알려졌지만 북한 정권이 국가적으로 중국식 농업 개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북한의 심각한 문제가 될 징후가 보이고 있다.

### 2. 리더십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고모부인 장성택과 그의 측근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최측근 7명중 5명은 모두 숙청되고 가장 고령인 두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장성택과 그의 측근들의 숙청으로 인하여 김정은은 김정일 시절 때처럼 군 중심이 아니라 김일성 시절 때처럼 당 중심으로 국정을 해나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3. 정보영역의 확대

북한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지만 탈북자와 다른 채널을 통하여 간간히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통한 고화질의 북한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2011년에 AP통신은 엄격한 제약 속에서도 서양 통신사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사무소를 열었다.

북한은 점차 정보흐름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서베이에 의하면 북한인민은 점차 정권의 선전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해외 라디오 채널을 통해 외부 정보를 얻고 있다. 북한은 2009년에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콕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통신네트워크를 재개했으며, 2백만명이 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4. 대중관계

중국과 북한은 무역·투자에서 여전히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인프라 개선, 자원 채취, 수출산업 창출 등을 위해 해외자금이 필요한데 북한 내부의 부패 등으로 인해 중국의 투자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교역대상국이지만, 북한은 중국에 지나친 의존과 상대적으로 외부에 개방된 사회인 중국으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국은 경제특구를 구축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중경협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인 장성택의 숙청으로 북중경협은 당분간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장성택의 자리는 김정은의 직접적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북한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추구는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라는 매개체를 통한 당대당의 제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중 양국은 모두 지나치게 서로 밀착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북한을 변호함으로써 중국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한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 III. 북한의 핵 협상 및 대외관계

#### 1. 북핵협상의 역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30년 가까이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은 처음으로 북한 영변의 핵시설 구축 징후를 포착했다. 그 후 1990년대 초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사를 밝혔다. 전직 클린턴 행정부 관리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핵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선제예방 공격(pre-emptive military strike)도 심각하게 고려되었다고 한다. 결국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의 제재와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의 외교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경수로 건설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94년 기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 측의 몇 차례 자금지원 지연과 북한 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이 기본 합의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결국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이 문제로 불거지자 미국 측에서 제공하는 경수로 사업은 진전 없이 2003년에 중단되었고, 2006년 북한의 핵사찰거부와 NPT탈퇴로 경수로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 2. 6자회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 때에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며 확대되었다. 이 6자회담은 중국의 중재로 2003~2007년까지 개최되어왔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결국 실패했다.

2005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원조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미관계                   합의하여 북핵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마카오의 한 은행에서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사건과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미 관계가 악화되어 북핵문제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2007년 2월의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핵시설 폐쇄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는 조건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2008년 10월 이후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적대적이며, 과거의 협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자회담 재개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 IV. 그 밖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

### 1.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국제적인 비난과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장거리 로켓을 두 번이나 발사하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998년, 2006년, 2009년, 2012년 4번의 걸친 실패 이후 2012년 12월에는 처음으로 우주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북한의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이후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자 클린턴 행정부와 논의되었던 미사일에 관한 합의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6자회담에서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북한은 시험 발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유엔 안보리는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로 대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진 2012년 '2·29합의'는 북의 탄도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점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탄두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아직 핵무장 미사일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전문가들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탄두를 단거리(800마일)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 2. 외부와의 접촉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기술자들의 확산은 미국의 심각한 고민 중 하나이다. 북한은 이미

이집트, 이란, 리비아,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의 나라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주요 경화획득 수단이다. 이 밖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든 전략적 무역허가를 통하여서든 민감한 물자를 제공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흔적도 있다.

### 3.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2009~2012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동안 미국, 일본, 한국은 탄도 미사일 방어(BMD) 시스템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일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도쿄주변과 서남부에 위치한 섬들에 패트리엇(Patriot) 요격미사일 체제와 이지스(Aegis) 미사일 방어함을 배치하였으며, 미군은 계획보다 2년 빠른 2013년 4월에 지상 전장 고도방공(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꺾에 배치시켰다.

이러한 탄도 미사일 방어 무기의 배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중국 매체는 2012년 일본의 패트리엇 요격기 배치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북한의 행동은 아시아 지역의 군비 강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 4. 북한의 인권 기록

미국 기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의회는 법안 통과나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국무부의 인권에 관한 연차 보고서나 민간기관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북한에는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자유의 부재, 지도자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비판 불허용,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부재, 독립적인 사법기관과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를 선택할 권리의 부재, 광범위한 이념 세뇌교육, 법규나 규제를 위반한 시민에게 심각한 수준의 육체적 학대,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 주민은 제한적인 의료서비스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4%의 가구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UN은 북한의 인권 위반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었는데,

2004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보고관직을 설치하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꾸준히 받고 있다. 그리고 일본, EU,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2013년 3월 처음으로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북한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알리고 있다.

## 5. 북한 난민문제

지난 20년 동안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 인권 유린, 박해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으로 피난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규모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30만명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있을 정도다. 다수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특히 여성은 매춘이나 결혼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난민 중에는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나 몽골로 피난하여 제 3국, 특히 한국으로 입국할 방도를 찾기도 하지만 북한으로 송환이 될 경우, 끔찍한 처벌 혹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미국 의회는 2013년 1월 1일 북한 난민 어린이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아동복지법(H.R. 1464)을 발효한 바 있다.

## 6. 북한인권법

2004년 북한인권법(H.R. 4011; P.L. 108-333)은 제 108대 의회 통과 후 부시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밟았는데, 이 법안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선택권을 제공함에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재가하며 미 대통령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08년에 의회는 북한인권법(P.L. 110-346)을 2012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12년 8월 의회는 이 법안(P.L. 112-172)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의회의 의사(Sense of the Congress)에서는 중국이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 7. 사이버 보안

2013년 미국의 보안 전문가와 기관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2013년 3월 20일 한국 매체와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용의자로 북한을 지목했다.

## 8. 북한의 불법 행위

북한이 위폐, 가짜 담배, 불법 마약의 생산과 운반에 가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수익을 위한 범죄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Banco Delta Asia)를 북한의 위폐 및 불법자금 세탁 거래은행으로 지목했는데, 이로 인해 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북한 자금 2천4백만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있던 북한 계좌까지 동결됐다. 이후 2007년 6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계좌 동결을 해제하고 해외 정부와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캠페인도 중지하는 데 동의하였지만, 2009, 2012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북한의 불법 행위와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만들었다.

# V. 미국의 북한 개입활동

## 1. 미국의 대북 원조

미국은 1995년부터 1.2조달러 가량의 원조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60%는 식량 원조, 40%는 에너지 지원에 사용되었다. 2007~2009년 4월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2009년 봄에 행해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핵폭탄 실험, 비핵화 중단 등으로 인해 추가 원조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이 시찰자의 평양 접근과 감시를 거절하여 2009년 초부터는 그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2. 전쟁포로와 실종자 합동조사(POW-MIA Recovery Operations in NK)

1994년 북한은 미국 정부를 초청하여 한국전쟁 참전 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귀환하지 못한 수천명의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합동조사를 시작했고 1996~2005년에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Military Command)와 북한군은 총 33번에 걸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2005년 5월 25일 북한의 6자회담 참여 거부로 미 국방부는 모든 합동조사를 멈출 것을 발표했다. 수차례의 회담 이후 2011년 10월 미국과 북한이 합동조사 재개에 합의했지만 2012년 초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고, 결국 2012년 3월 미 국방부는 합동조사를 다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 3. 북한 주재 연락사무소 개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상호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포함한 미국·북한 핵동결 협약으로 정치적·경제적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부시 행정부에서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차관보가 연락사무소의 상호 개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12월 미국 대북특사 자격으로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대사가 평양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언론에서는 보스워스 대사가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추측하였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단호하게 부정한 바 있다.

## 4. 비정부 기구(NGO) 활동

미국 NGO들은 농업, 건강, 비공식적 외교, 정보과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 능력 배양과 인적 교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도 북한 NGO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